"20년 풀뿌리 지방자치 훼손" "행정력 낭비 막을 개선책"

지발위 '지방자치발전 계획' 찬반 논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안 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강력 반발 일부 시민 "기초의회 폐지해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 후 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선제 폐지, 특별시·광역 시 소속 기초의회 폐지 등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지 방자치제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즉각 반발 성 명을 냈으며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20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시민과 공무원 등 일부에서는 "행정력 낭 비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우선 지역정가에서는 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선 제 폐지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지 방자치제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대 여론이 주 를 이뤘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 하는 처사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너뜨리 는 일이다"고 반발한 뒤 "하지만, 구청장 직선제 폐 지는 여야 양당간 합의사항이고, 헌법개정이 이뤄 져야하기 때문에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 시장)도 이날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자치구제의 폐지는 지방 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발위가 국민적 합 의나 당사자인 자치구는 물론 지방 4대 협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절차상 의 중대한 하자"라고 발끈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발위의 발표대로 자치구가 폐 지되면 대도시 주민의 생활 자치와 복지, 주민의 현 장 참여 및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한받게 되 며,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주민의 접근성 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자치구 폐 지 결정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 적 구조로 회귀하는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여야·종교·시민단체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에서 군·구별로 독 자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다며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

광주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광역시는 대부분 하 나의 도시 단위로 생성된 특성상 지역 정서나 생활 권이 동일한데도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군·구 별 행정시책이 달라 시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구청장 임명제를 도입하면 시가 추진하는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해 각 군・구가 힘 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관련해서 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표출

심재섭 광주 북구의회 의장은 "선거때만 되면 기 초의회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웃기는 일이다. 이 는 정치권이 자꾸 기초의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기초의회 의 장단협의회 모임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

김점기 광주 남구의회 의장은 "오히려 광역의회 를 없애고 기초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4년 동안 주민을 상대로 의정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주민 접 촉을 하는 주체는 기초의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론에 찬성하는 여론

도 상당수였다.

주부 장모(47)씨는 "기초의회와 관련한 뉴스 중 기억나는 것은 감투싸움, 관광성 외유 정도 밖에 없 다"면서 "광역시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폐지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 다"고 밝혔다.

직장인 민모(46)씨도 "사실상 재정도 광역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기초 의회 공백을 광역의원 수를 늘려 해결하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없애고,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한 뒤

해당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는 수도라는 상징성과 인구 등을 고 려해 구청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 다. 광역시의 구청장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 만 어렵다면 유지하는 방안을 2안으로 내놨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확충 등 중점…경기회복 뒷받침

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일반 회계+특별회계) 322조7871억원의 68%를 상반기 에 배정하기로 했다.

률 68%는 2012년 70.0%, 2013년 71.6%보다는 낮 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이었던 올해 65.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획을 많이 잡아 발표하며, 대체로 집행률은 배정률

과 일정 간격을 두고 연동되는 경향을 보인다. 상반 기 예산 배정률이 70% 가량이었던 2009년과 2010 년, 2012년, 2013년의 예산 집행률은 모두 60%대였

반면 상반기 배정률이 67.3%였던 2011년과 65. 4%였던 2014년은 집행률이 각각 57.4%와 57.1% 수준이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올 해보다 높인 것은 내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 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에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 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내년 예산 집행계획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

은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가 39.6%로 가장 많고 2분기 28.4%, 3분기 19.6%, 4분기 12.4%다. 후반기로 갈 수록 배정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상반기 예산 배정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상반 기 집행률을 55.0%로 잡았다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 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자 57.1%로 올린 바 있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 자금 집행 계획보다 배정 계

내년예산 광주 3조8485억 전남도 6조2831억

시교육청 1조6922억, 도교육청 3조534억 시·도의회 의결

전남도의회는 9일 오전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2015년 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남도 2015년 예산은 전년보다 4800억원이 증 액된 6조2831억원, 전남도교육청 예산은 전년보다 495억원이 증액된 3조534억원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지난달 7일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를 거친 바 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남도 예산안 중 한옥발전기금

출연금 15억원 전액, 전남도립대 전출금 12억원, 전 남도 수출진흥기금 6억원 전액 등 32건 56억6770만 원을 삭감하고 20억1390만원을 증액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8일 오전 제234회 정례회 제3 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와 시 교육청 내년도 예산 안 3조8485억여원, 1조6922억여원을 각각 의결했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3조8500억원 규모의 광주시의 내년 예산안 심사 에 착수, 일반회계 기준 90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35억4000만원을 순증액하고 40억2000만원을 예 비비로 전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